

제주항공 참사 1년…진상규명·경찰수사 ‘허송세월’

책임자 수사 대상 범위 못 정하고 추가입건 반복…경찰, 44명 입건
구속 혐의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 마무리 해 검찰 송치도 못해
사조위 ‘셀프 조사’ 논란 속 결과물도 없이 국토부에서 독립 앞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가 다가왔을 때 진상규명, 경찰 수사 등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등 공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 대상자 범위를 정하지 못하고 추가 입건을 반복하고 있는데다 구속 혐의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진상규명도 최근에서야 조사 전담 기구를 이해당사자인 국토교통부에서 독립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이 겨우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첫걸음도 제대로 못 떼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과거 국토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항 운영증명, 공항운영검사 등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무안공항의 활주로 끝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설치, 유지하면서 콘크리트 둔덕을 쌓아올려 사고 피해를��운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자 44명을 입건했다.

경찰이 당초 입건한 수사 대상자는 지난 6월 기

준 24명이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업체 관계자, 관제·조류예방 업무를 맡은 국토부 공무원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항공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로 컬라이저 건설, 유지 등 업무와 관련된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들을 차례로 추가 입건하면서 수사 대상자는 두 배에 가까운 44명까지 늘어났다.

경찰은 “각종 진술과 기록 등을 따라가면서 무안 공항을 짓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추가 입건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수사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앞으로 추가 입건될 대상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진상을 밝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는 사고 1년동안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사조위를 무안공항 건설·관리 책임자인 국토부의 산하 기관으로 꾸리는 바람에 ‘셀프 조사’를 하는 상황이 되면서 1년 내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사조위는 논란 1년만에 국토부에서 독립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4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조위를 국토부 산

하 조직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 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사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 개포 이후 한 달 뒤에 즉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현 사조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결국 사고 조사 1년만에 사조위를 새로 꾸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조위는 지난 4~5일 공정회를 열고 그간의 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도 세웠으나, 유가족의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사조위가 사고 기 엔진에 대한 조사 결과 “엔진 자체 결함은 없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려다 유가족들로부터 ‘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듣고 무산됐다.

유가족들은 지지부진한 수사와 진상규명 때문에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담합 혐의를 호소하고 있다.

고재승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추가 입건만 3·4차례 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아 경찰의 수사의지도 없어 보인다. 실무자들만 무더기 입건해 봄아 ‘꼬리 자르기’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와 진상규명 조사는 별개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조위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가 다가왔지만 진상규명, 경찰 수사 등은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안국제공항 2층 한켠에 설치된 유가족 텐트와 조속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현수막.

/무안·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정부, 조류 충돌 위험 평가지침 마련한다

공항 인근 개체수 이외 분포·밀도·이동경로 등 종합 평가

이달 중 제정 공표키로

공항을 건설·확장할 때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을 평가하게 하는 정부 지침이 마련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중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안’을 제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지침안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정한 ‘조류 충돌 위험구역’인 공항 반경 13km 이내에 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는 표준방법이 담긴다.

핵심은 야생조류 모니터링 시 기체수뿐 아니라 분포, 밀도, 이동 경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조류의 서식지 활용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도시 계획을 짤 때 거주 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동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신규 사업이 조류 충돌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누적영향평가’ 방식도 도입된다.

공항 반경 13km 바깥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위험 구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구역 내 기존 사업의 영향과 합산해 위험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한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막대한 항공기 대 조류 충돌 위험을 종양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기후부는 지침 도입으로 공항 주변 생태계를 건강하게 관리해 새들의 서식지 활용 패턴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류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선호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공항마다 다른 조류 충돌 위험평가도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다. 현재 공항·비행장 개발, 활주로 신설·연장 등의 과정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만, 조류 충돌 위험 항목은 포함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생략되거나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

/연합뉴스

나주 왕곡면 주민들 “왜 우리동네는 혐오시설만 들이나?”

‘혐오시설’ 2곳이 이미 들어선 나주시 왕곡면에 폐기물 소각장 설립이 다시 추진되면서 시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가 된 부지는 이미 축산 분뇨,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 관리 대상 시설이 집중된 지역인데다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곳인데, 대규모 소각·슬러지 시설까지 더해지면서 “나주가 전국 폐기물 집하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 범야취대책위원회(공산·왕곡·동강·반남·다시)를 비롯한 나주시민 400여 명은 지난 5일 나주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바이오팍크’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왕곡면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민간업자가 설치 추진 중이며, 하루 72t의 사업장폐기물과 오염된 퇴적물을 뜯는 오니(汚泥·슬러지) 200t 등 총 272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대책위 등은 해당 시설이 설치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역 피해권 상생협

축산분뇨처리장 등 2곳 있는데

폐기물 소각장 재추진에 반발

시의회도 반대 결의안 채택

약 미이행’, ‘주변영향지역 조사·고시 누락’,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조개기 설계 의혹’ 등 하자가 있다는 것이 이를 주장이다.

또 나주시가 의도적으로 폐기물 처리량을 ‘사업장 폐기물’과 ‘슬러지’로 나눠 보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주시가 시설 소각 용량을 72t(사업장폐기물 처리량)으로 해석하면서, 하루 처리 용량이 법적 기준(100t)을 넘지 않아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t 규모의 슬러지 설비는 애초 환경영향평가 대상 용량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왕곡면 송죽리 일대에 1990년대 후반부터 건축폐기물 재활용·처분장, 축산 분뇨·부산물 처리시설 등이 잇따라 들어섰는데도 또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있다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나주시의회도 지난달 28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왕곡면 송죽리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해당 시설은 하루 72t의 사업장 폐기물과 200t의 슬러지를 처리하는 초대형 중간처리시설”이라며 “운영이 시작되면 타지역 폐기물 반입이 불가피해 악취·분진·폐수 등 환경 피해와 교통 위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주민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시의회와 공조해 행정사무감사 요청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각장 설치를 저지하는 방침이다.

한편 나주시 측은 “사업 대상자가 주민들과의 소통 및 설득이 미진했던 점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시설이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을 바로 당신입니다.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